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윤성규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필자약력>

- '79. 2 : 한양대 기계공학과 졸(학사)
- '90. 8 : 독일 클라우스탈공대 대학원 환경기계과 졸(석사)
- '77. 2 : 제13회 기술고등고시
- '77. 12~'92. 1 : 환경처 수질제도과, 서울환경지청, 해외훈련(독일)
- '92. 1~'95. 6 : 환경부 폐수관리과장, 소음진동과장, 기술정책과장
- '95. 6~'97. 6 : 해외파견(독일연방 환경부)
- '97. 6~'01. 3 : 유독물질과장, 폐기물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 '01. 3~'02. 8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02. 8~ 현재 :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1. 들어가는 말

과거 30여년의 압축성장으로 인한 환경적 유산을 이어받은 참여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하였다. 시민사회는 참여정부가 현안 환경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어려움을 더해 갈 경제문제와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이후 내린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등과 같은 정책들을 결정하면서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거나 경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는 참여정부가 "반환경적"이라고까지 단정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2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내린 정책들도 앞으로 다듬어 가야 하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참여정부가 "반환경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예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참여정부가 21세기 국가경영의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잡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할 5년이라는 기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쾌적한 환경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 마땅한 권리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변수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인 바, 이하에서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환경정책의 여건과 전망

우리나라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던 소위 '보릿고개'를 퇴치하기 위하여 압축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경제의 양적 팽창에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환경보전은 미처 배려하지 못해 환경오염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좁은 국토와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환경용량이 매우 제한적인 여건에서 과밀한 인구(인구밀도 476명/km², 세계 3위)와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된 산업화, 80%를 넘는 도시화율 등은 우리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열악할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좁은 면적임에도 전국 인구의 45%, 자동차의 43%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대기질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환경보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 진행된 압축성장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151kg/ha('99 OECD 보고서)로 미국의 7.7배에 달하는 등 국토면적당 환경부하량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등으로 아황산가스, BOD, 일반폐기물 등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의한 위해가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여가시간 증가로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위주의 개발우선 정책의 여파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기에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이해집단간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환경문제를 무역장벽화 하려는 조치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후변화협약의 감축의무 이행국가로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산업구조가 에너지·자원 다소비형인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협하고 속박할 것으로 보여 국가경쟁력과 지속성을 결정지을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III.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추진방향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목표는 환경적 건전성, 경제 효율, 사회 정의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의 건설」이다. 따라서 사전예방원칙의 구현, 환경과 경제의 상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참여행정의 실현을 정책기조로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환경·경제·사회'라는 3개 핵심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통합성 제고

우리나라는 과거 외적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21세기의 글로벌 이슈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정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지속가능성평가지수(NSI: National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정책에 Feedback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00년 9월 출범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경제·사회·환경 등 국가 정책전반을 지속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협의·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국토환경 조성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 단계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선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10개년)」을 수립하여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전예방적인 국토환경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현행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각종 정책이나 계획, 개발사업들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단계적으로 제작·보급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 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선계획 - 후개발"의 전형이

되는 모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건설단계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녹지 확보, 전기자동차 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태양열 이용, 중수도 설치,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위한 자연경관보전 강화

「백두대간 - 비무장지대 - 도서·연안」등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을 기본으로 국토의 통합 생태관리망을 구축하는 “한반도 생태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 나가는 한편,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으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서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와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토양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폐광, 군부대 이전지역 등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복원을 실시하고, 토지용도를 고려한 토양오염기준 설정 등 과학적인 토양복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자연친화적인 국립공원 이용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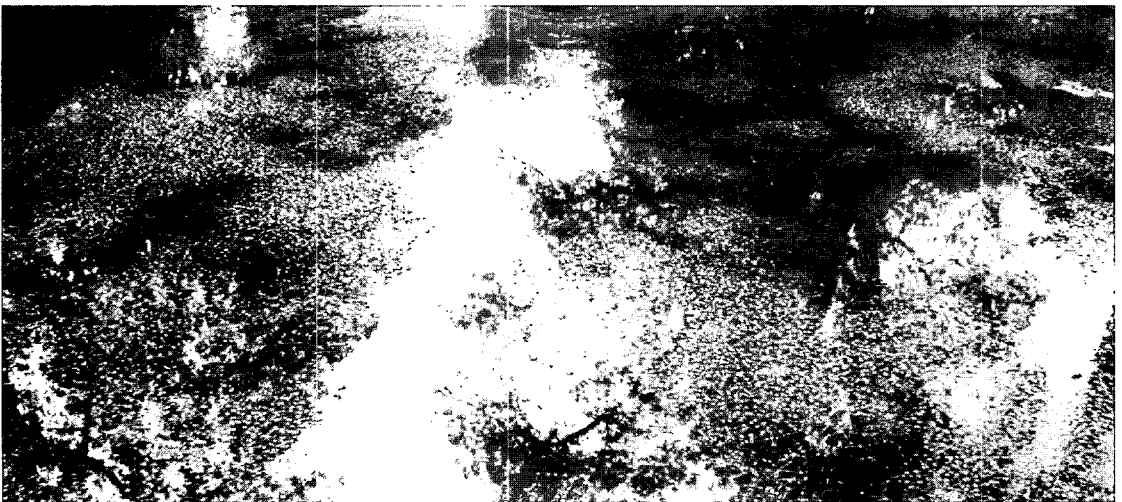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이용체계를 자연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자연학습관찰로를 설치하고 탐방가이드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우량(雨量)경보기의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립공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탐방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탐방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훼손 예방을 위해 자연휴식년제와 탐방예약제를 확대하고, 국립공원을 야생 동식물 생태자원의 복원메카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 환경친화적인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에코-2 프로젝트 추진

최근 선진국들은 환경기술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쟁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환경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환경질의 개선은 물론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2007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앞으로도 역점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벤처펀드 조성, 공공기관의 환경신기술 우선 적용, 중소기업의 신기술 검증비용 지원 등을 추진



하여 개발된 환경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환경시장을 우리 업체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한 환경협력사업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센터 설립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 생산·소비체제 구축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은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수요기반은 사회·경제체제가 친환경적일 때 비로소 구축될 수가 있다.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환경성과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신용평가나 투자결정 시 기업의 환경위험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에코디자인 보급을 확산하고, 친환경 원·부자재 공급망관리(Eco 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녹색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환경표지 대상제품, 그린빌딩 인증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칭)녹색구매법의 제정도 추진할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계 개편

Clean Energy보다는 Dirty Energy가 비싸도록 하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충분히 내재화되도록 하여야 불합리하고 반환경적인 에너지 가격구조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유틸리티 가격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특소세 등이 산업영향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환경성 측면에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시키는 환경세 개념이 반영되도록 에너지 세계의 개편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이다.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정책을 토대로 사전예방원칙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을 가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나갈 것이다.

마음놓고 숨쉴 수 있는 도시 대기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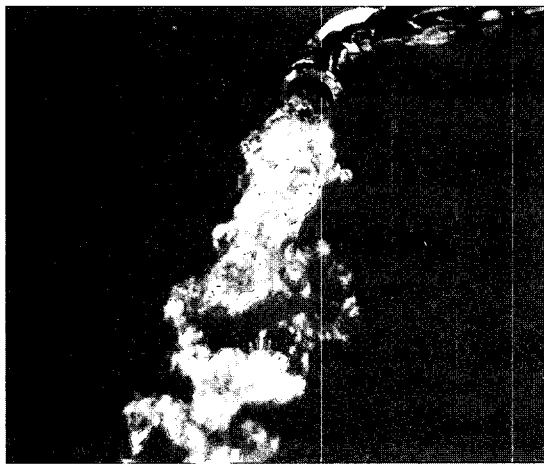
좁은 지역에 인구나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배출허용 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저공해차 도입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제정을 금년내 마무리하여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2%(200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경유차로 인하여 추가오염은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을 함께 강구할 것이다. 즉 연료품질기준의 강화,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유가격 인상 등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수질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전예방정책과 상하류 공영정신을 토대로 수립한 4대강특별대책과 이의 시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된 4대강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오염총량제 등 선진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BOD 기준 전체오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 그 대응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욕적인 대책들을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UN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1인당 1일 물소비량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



다. 그간 물을 물 쓰듯 하여 늘어나는 물문제를 물공급, 관리만으로 해결하려 해왔으나, 앞으로는 물절약시책 등 물수요관리 측면으로 정책방향을 확실히 전환해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노후수도관 교체, 중수도와 절수기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치중하였던 사후관리 위주의 폐기물관리체계를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전발생 억제방식으로서의 전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의 적용대상 품목의 단계적 확대, 품목별 수거·운반체계 구축, 재활용인프라 확충과 병행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을 적극 시정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초석을 다져 나갈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건설폐기물 등 다량발생·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최대한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고 연료화 등 자원화방안을 다각화하며,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재생골재의 수요창출을 위한 사용의무화와 권역별 생산·유통기지 건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도한 일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억제를 위한 규제의 강화와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쓰레기의 수집·처리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되고 사용량도 늘어나 환경에 잠재적인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 배출량 조사·보고제도 확대, 평가기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오염사고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신 국제환경질서 형성에의 능동적 대응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후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구환경질서의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작용할 "WSSD 이행계획"에 대한 국내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서비스시장의 개방요구 등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환경협상에 대한 협상전략과 함께 국내 대응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앞으로 더욱 거세질 국제사회의 감축의무 동참압력에 대한 협상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협력 확대 및 내실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새 가 족

협회 회원 가입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을 위해서는 역내 환경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해 산성비, 황사 등 동북아 환경현안의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3 환경장관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협력사업을 본격 전개하여 환경외교의 저변과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하여 UNDP와 GEF 등 국제기구와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두만강유역 환경보전 및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사업 등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열린 환경행정 구현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 하에서 복잡다양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의 전 분야에서 국민참여와 공개를 확대하여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지방분권, 행정혁신과 민원업무의 디지털화를 앞당겨 국민에게 신뢰받는 녹색정부를 구현하여야 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선진 환경관리

앞으로는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자율적 참여와 책임에 기초한 민주적인 환경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역 및 산업별로 자율 환경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정부, 기업, 주민 등 사회의 주체들이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정책의 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분석하여 환경효과와 경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조합(Policy Package), 환경정책의 채택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의의 실현 등 최근 OECD 등 환경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진 환경정책들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일킨(대한)(주) 비엔디(위더산업개발)(주)	조규진 채르류사수	경북 영주시 적서동 2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106-27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이석재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44
(주)일광주공 일진알디(에스)(주) 세일칼장(주) (주)신화하이테크	김종덕 이종백 권태혁 이재영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33-5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06-1 충남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15-129 충북 충주시 풍동 786-6
삼성중장비서비스부산판매(주) 허치슨감만켄테이너더미널 성림중전기(주) 화성금속(주) 태화프라스틱 제일산업 금호화성 (주)동양전기정공 (주)코르발조선 (주)성호실업 대호수지 형제포금 풍강금속 삼보목재 (주)광산 광명인크 대구방원정래식장 허리크크리트(주) 경주황동학주 (주)대성석품 성우산업사 석원석재 태평양금속 아진산업(주) 대영산업 (주)대경섬유 무지개산업 신라석재산업 원재코팅 에크미알로이 선도화학(주) (주)한일그린텍 삼표산업(주)천안공장 미래기술산업 고려환경개발(주) 대명프라텍 (주)동일보일러 (주)동양기업 신천전기외 (주)세한 INP중공업 현대기연(주) 금호섬유공업(주) 마크로산업 국민정비 (주)스틸카스피	이상균 에디웨인테 이영환 박수열 강원수 노재삼 장정수 김학률 김성대 권동철 손영희 윤정출 부산 사삼구 김분남 김홍순 이남규 주창대 이호택 김성림 전방상 박이수 박래복 이진길 김종명 정요한 여상배 김희자 김영수 황규연 이길우 이만홍 김종규 김 호 조희석 안성길 김복환 주영재 김용환 조태연 최하룡 강호관 홍순영 임세운 김영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67-4 부산 남구 감만동 624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06-6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82-9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31-1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61-13 부산 사상구 확장동 235-5 부산 강서구 송정동 1497-7 부산 사하구 김전동 391-1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49-2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48-4 부산 사상구 폐반동 566-12 부산 사상구 폐반동 566-12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82-1 부산 사상구 확장동 749-6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34-1 대구 북구 태전동 796-3 경북 경산시 남천면 홍산리 641-21 경북 경주시 성강동 666-10 경북 성주군 월명면 정산리 1549 대구 달서구 월암동 670-8 대구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296-1 대구 서구 이현동 47-316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91-3 대구 북구 노원3가 151 대구 서구 이현동 42-308 대구 달서구 장기동 180-1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920-1 대구 북구 노원3가 21-1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 416 충남 서산시 대신읍 대죽리 786-14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7 충남 천안시 성기읍 오목리 14-3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6-8 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암리 464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용리 32-11 대전 서구 황촌동 60 울산 동구 화정동 109-1 울산 동구 양아동 175-1 울산 북구 연일동 683-10 울산 울주군 용촌면 고연리 1033-3 울산 울주군 상남면 가전리 852-132 경남 창원시 팔용동 11-7 경남 창원시 성산동 65

지역성·쾌적성이 조화된 지역 환경공동체 구축

지난해 개최된 WSSD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지방의제21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실천을 중시하는 지방행동21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의제21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역단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 환경성 평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정제도를 "친환경지자체(Eco-City) 지정제도"로 발전시켜 지자체의 환경성과와 함께 시범사업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된 지자체를 에코시티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정부의 구현과 환경행정 혁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제품 등 환경제품 녹색구매, 물·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환경관리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환경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단속실명제 강화, 시민감시활동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 부정부패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행정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IV. 맺는 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21세기 패러다임은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진국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위기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정책의 형성과 추진시에 환경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생산체계를 지향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은 환경친화적인 소비행태의 정착과 지역환경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앞에서 제시한 주요 환경정책과제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